

# ISO 26000 Social Responsibility Guidance 제정 동향과 과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ISO 26000 논의 현황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이미 국제인증인 ISO 9001이나 ISO 14001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조직이다. 국제민간표준을 다루는 기구인데 여기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SR)에 대한 자발적 표준으로 ISO 26000을 만드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7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는 실무그룹(working group) 4차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미 나온 초안의 두 번째 버전에 대한 토론 및 조정과 향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었다.

향후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이것이 확정되면 이는 회원국들의 투표로 확정되고 현재 일정대로라면 2009년 중에 최종 guidance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물론 ISO가 구속력 있는 이행 강제력을 가진 기구가 아니고 ISO 26000은 제3자 인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참가한 대부분의 국가와 이해관련자들은 결국 기업간·국가간 거래와 계약질서에서 ISO의 SR Guidance가 매우 결정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누구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이나 실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해온 데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ISO 26000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와 프랑스 등이 유럽 국가들이 발의 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작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기업활동은 이미 이해관계 당사자 모델에 기초하고 있

으므로 이들 국가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유리한 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개도국들의 많은 사회적 이해당사자들도 다국적기업들이나 개도국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예방될 수 있는 기준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ISO의 SR 작업 반에는 기업만이 아니고 정부, 노조, 소비자대표, NGO단체, 기타 전문가들이 이른바 이해당사자(stakeholder) 자격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결국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만 작업 초기에 ISO 26000은 CSR로 출발했지만 기업만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발로 인해 “C”를 버리고 “SR”로 수정되었다. 사회적 책임표준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업만이 아니고 정부도, 노조도, NGO도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준수 실적을 외부에 보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미 논의 과정에서 자기 조직만이 아니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영역에 대한 책임을(기업들은 공급사슬망에 대한 책임이 대표적)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 조달에서 사회적 책임 성과가 떨어지는 기업으로부터의 구매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 ■ ISO 26000의 역사적 배경

ISO안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CSR의 범주와 실천과제들과 거의 동일하다. 환경, 노동, 인권은 물론이고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이 다 포함된다. 특히 UN의 Global Compact와 ILO(국제노동기구)하고는 ISO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긴밀히 표준작업에서 협력하고 있고 이미 기업들이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도 작업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이들이 가진 CSR의 주요 기준들과 이슈들은 통합적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명시적으로, UN의 인권협약이나 ILO의 노동권 핵심협약은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주도 세력들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결국 뒤돌아보면 ISO 26000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문제들의 부활이자 결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

1990년대 초에 우리가 한창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먹고 있을 때, 밖에서는 지구환경

문제와 노동기본권을 세계무역질서와 연계해야 한다는 이른바 그린 라운드(Green Round)와 블루 라운드(Blue Round)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WTO 무역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는 한동안 세계무역 및 투자규범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규범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선진국들의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 장벽이라는 개도국들의 지속적인 반발에 부딪혔고, 2001년 도하 WTO회의 이후 한동안 시장과 규범의 연계노력은 잠복되었다. 그 즈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계의 공장이란 표현을 들으며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챔피언이 되었고 이어 인도는 전 세계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위협하는 강자가 되었다. 우리가 외환 위기 극복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BRICs가 부상했고 최근에는 베트남, 유럽, 터키 등 또 다른 신흥 강국들이 등장했다.

투자 자본은 세계 각지에서 이런 이윤창출 기회를 좇아 돌아다녔고, 글로벌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질서는 WTO의 무기력한 역할과 FTA 등을 통한 양자간 역할의 강화 과정에서 실종되는 듯했다. 양자간 약속에서는 시장 이익을 노골적으로 증진할 수 있고, 다자간 약속에서는 공통의 기본적 규범이 중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자간 논의의 약화 과정에서 감히 시장에 대해 규범을 들이대는 것은 매우 공허하고 무기력한 노력이라고 치부해 왔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규범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다른 한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하나가 시장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범을 만들자는 논의이다. 처음에는 윤리적 운동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 가히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사실 그다지 조용하게만 진행되어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단기주의 시장이익 실현에 몰두해 온 지난 5년간 이런 소리를 애써 외면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ISO 26000에서 노동분야의 핵심 이슈

여전히 일부 기업들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사회적 책임의 핵심 이슈로 선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총회에서 재차 결의된 것은 지배구조, 환경, 인권, 노동관행, 공정행위, 소비자보호, 지역 사회 및 사회개발공헌 이렇게 7개 영역은 빠질 수 없는 핵심 이슈이고, UN 인권선언, ILO의 노동기

본권 관련 핵심 협약, UN Global Compact의 10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된 7가지 핵심 이슈 중에서 노동과 관련된 이슈 중 일부는 인권 부분에 들어가 노동기 본권으로 담겨 있고 나머지는 노동관행(Labor Practices) 이슈로 분류되어 있다. ISO SR 초안에서는 해당 이슈의 논의 배경 및 범위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 중 ISO가 노동 이슈를 바라보는 적극적 입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발췌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노동 문제, 아웃소싱과 공급사슬

조직 특히 사업 조직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고용과 노동 문제이다. 이 이슈에 관한 정부의 기존의 역할은 노동보호 및 사회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노동보호에는 임금, 노동시간, 보건 및 안전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포함한다. 사회적 규정은 다른 것들 중에서 의료, 부상 또는 은퇴시 수입원 대체 등을 의미한다. 노동보호와 사회적 보호 두 가지 모두는 때때로 노사관계의 인식 문제와 관련된다.

일명 전체적인 의미에서 노사간 관계로 대표되는 산업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일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산업관계와 단체협약은 고용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적절한 수입과 고용보장은 사회의 주요 관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과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노동자의 노조 설립과 가입 권리를 보호하리라 기대한다.

노동과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사회정의와 세계평화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되어 모든 정부에게 구속력을 가진 국제노동 표준을 수립하였다. 다양한 이유로 정부는 이러한 표준을 적용하는 책임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세계화와 다양한 형태의 사업 조직은 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의 위해 노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의무를 보다 쉬운 방법으로 회피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노동자 착취와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은 많은 정부가 실패한 1인 공급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노동 문제를 기업이 자신들의 공급사슬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업 스스로 인정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자신의 전체 공급사슬에 걸쳐 적용되는 노동 문제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강령의 목적은 때때로 정부가 적절한 인권보호 활동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 기업이 윤리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ISO SR 초안에 나타난 정의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핵심 이슈 :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의 존중은 그 자체로 필요하며, 조직은 노동자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노동기본권에 관한 이슈는 노동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노동기본권을 다룰 때 조직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국내법과 규약 준수 및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려
- 단체협약 준수
- 기준연령 이하의 아동고용금지
- 위험한 작업에 18세 이하 청소년 고용금지
- 여성노동자를 위한 아동보호시설
-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정치적 신념, 민족·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부 정책 및 규정
- 공급채널 내 조직에 의한 인권 침해에 공모하지 않음.
- 노동자의 권익과 단체협약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
- 강제노동 또는 담보노동 금지
- 조직의 인권보호 존중과 책임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 고려시 조직은 다음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원칙
- 노동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 ILO 협약 29, 87, 98, 100, 105, 111, 138, 182
- 유엔 국제협약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국제인권장전

## ■ 우리의 대응실태와 과제

2001년 UN의 Global Compact 제정 이후 인권, 환경, 노동권, 반부패 규범을 존중하겠다는 전 세계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났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었다. UN Global Compact 가입기업수가 2006년 말 기준으로 미국 160개, 프랑스 453개, 이탈리아 143개, 브라질 158개이고 아시아에서도 일본 51개, 중국 69개 필리핀 46개, 인도네시아 38개인 데 비해 한국은 고작 14개이고 그나마 한국의 대표기업중 상당수가 빠져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취임이후 한국의 가입기업수를 보고 한국기업들에게 특별한 부락을 할 정도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무관심은 필자가 참가하고 돌아온 ISO(국제표준화기구)의 26000 사회적 책임 Guidance 제정을 위한 시드니 회의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이해관계자 모델에 익숙한 선진국 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도국들의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규범을 찬성하고 있다. 일본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대기업들의 대표조직인 경단련이 중심이 되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60여 개국 330 명이 참가해서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ISO 사회적 책임 제정 워킹그룹 총회에도 개별 기업들이 아닌 경단련 중심으로 대규모 대표단 및 지원인력이 참가했다. 반면 한국은 기업대표로 유한킴벌리가 그 리고 포스코가 읍져버로 참여했을 뿐,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 등의 관심이나 참여 의지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ISO 26000은 현재 일정대로라면 2009년부터 발동된다. 이는 시장에서 규범을 준수하지는 그동안의 UN Global Compact나 국내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자 나아가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규범에 기초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가 목도한 것이 지구환경, 인권, 노동권을 무시하면서 지난  
친 하향 경주(race to the bottom)를 하지 말자는 취지였다면 ISO 기준은 반드시 상향 경주(race to the  
top)를 해야만 구매계약, 투자유치, 무역규제에서 패자가 되지 않는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ISO 26000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들 관련 이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기업, 정부,  
기타 사회 조직들이 감당하기에 매우 벅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회 기간 중 김영호 유한대학  
학장(전 산자부 장관)께서는 세상이 시장질서에 관해 이해관계자 중시 모델로(stakeholder model)로 바  
뀌고 있는데 우리만 신자유주의적 시장모델에 머물고 있다고 여러 번 위기감을 토로하셨다.

돈은 매우 민감한 것이다. 돈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둔감하다면 이윤창출은 힘들다. 지금 시장이  
윤리를 최대 덕목으로 여기게 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돈을 움직이  
는 세계의 실력자들간에 지속적인 자본 활동을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총성 없는 자본간  
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문제는 기업과 사회가 시장 원칙에 대한 찬반 논쟁에 빠져 자본  
과 기업은 물론이고 NGO, 노조, 정부 모두 세계 자본주의운동을 제대로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KLI**